

“산사태 철저대비,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
산림청, 장마전선 접근 앞두고 지자체·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응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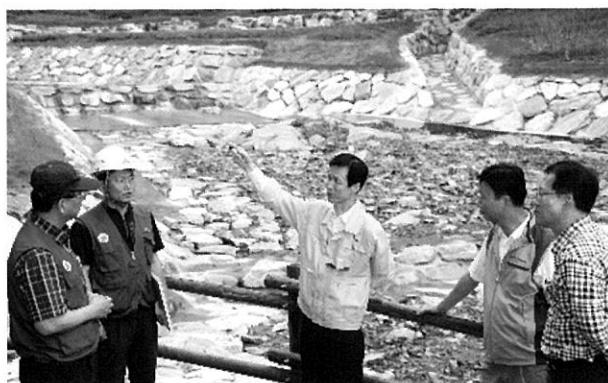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7월 10일 이날부터 다시 한반도에 접근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산사태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의 산사태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미 지난 5월부터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각 시장·군수 등 전국의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산사태 예측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시나리오를 통한 산사태 대응체계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 복구현장 점검



이돈구 산림청장은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 등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복구현장을 찾아 산사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이 곳은 이미 복구가 완료됐지만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시로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해 작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11일 품종관리센터서 사법경찰 발대식

… 불법유통·품종보호침해 등 송치 임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

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벅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

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산림청·농촌진흥청·기상청

녹색성장 업무협약식



산림청은 7월 23일 오후 서울 녹색성장체험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농촌진흥청, 기상청과 녹색성장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이돈구 산림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 협약서를 교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